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9면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공개	1
江原日報	11면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성료	1
The JoongAng	18A	월 150만원→200만원 ...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린 지방의...	2
원주 MBC	온라인	강원도·시군의회 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	2
KBS 춘천	온라인	"8,000원에 한 끼?"..."급식카드는 편의점에서나"	3
철원인터넷		강원철원-명절 대목장보기는 전통시장이 짱~![1/2]	4
강원도민일보	13면	평창군 읍·면 순방 군정 청사진 공유	6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	6
江原日報	11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7
江原日報	01면	채소 몇개 고르니 8만원 '공포의 명절 물가'	7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소기업 소상공인 빛 못 갚고 두손 들었다	8
江原日報	07면	빛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 강원신보 대위변제 475억	9
江原日報	04면	플라이강원 또 매각 불발 ... 상반기 재운항 불투명	10
강원도민일보	14면	철원군 내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신청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재임용 절차 중 사임...공백 장기화 우...	11
강원도민일보	10면	강릉원주대·강원대 공동 'K-LINC' 출범	1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집중	12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시 GTX-B 연장 국가철도망 반영 박차	12
강원도민일보	09면	옛 드림랜드 개발 늑장 속타는 지역사회	13
江原日報	02면	"화천 '교육 1등 지역' 자리매김 적극 지원"	13
江原日報	05면	'34cm 눈폭탄' 도로·항공편 마비 교통사고 속출	14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영동·산지 30cm 눈폭탄	14
江原日報	01면	설 연휴 코앞인데 ... 연일 폭설에 '雪雪'	15
강원도민일보	05면	폭설에 버스 결행·미끄럼 사고 속출...지자체 '제설 전쟁'	15
江原日報	07면	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할증 20% 일괄 적용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설 명절 체감물가 더 내려가야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가 중요하다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선거구 득장 확정, 정치 신인 싹을 자르는 행위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따뜻한 설 명절, 장바구니물가 안정에 달렸다	20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09면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공개

기부자 예우·기부문화 공유 공간
간편 기부 참여 '키오스크' 설치도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5일 공개됐다. 원주시는 이날 시청 로비에서 원강수 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최미옥 시의회 부의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나눔명문기업 및 명예 천사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가졌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4만 8000여 기부자 이름이 기록돼 있다. 시민 누구나 간편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키오스

크도 설치됐다. 이날 원강수 시장이 첫 기부에 나서 인증샷을 찍고 기부증서를 발급받았다. 지역 복지 실현에 힘쓴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나눔 공헌 감사패 수여,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서종성 시 나눔봉사단장, 하동균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12사랑봉사회, 봉주르원주봉사단, 빈의자의사회가 받았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정의수 단정바이오 대표의 부인 이규란 씨, 김종태 빌라드아모르 대표의 부인 권영옥 씨의 가입으로 ‘부부아너’ 2쌍도 탄생했다.

원강수 시장은 “명예의 전당 조성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기부에 관심을 갖고 기부가 생활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민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11면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성료

【원주】그동안 원주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의 이름이 원주시청에 걸렸다.

원주시는 5일 시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와

기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명예의 전당의 시작을 알리는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

의장,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만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종태 원주권 아너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규기자

2024년 02월 06일 (화)

The JoongAng

충청/강원 18A면

월 150만원→200만원 ...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린 지방의회

(광역의회 기준)

작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충북·강원도의회 잇따라 인상
기초의원도 150만원으로 올려
“지자체 세수 부족한데” 지적도

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예산 의결권을 쥔 지방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전국 광역·기초의회는 올 초부터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공청회,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

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방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 조항이 사라지고,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회 150만원 이내,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로 정했다.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며 월정수당이 신설됐다. 이때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는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보조할 의정활동비 등 2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거나, 심의위 자율로 꾸준히 올렸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상한선이 20년 동안 유지됐다. 지방의원들은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 현실

화가 필요하다”며 인상을 촉구해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자 전국 지방의회는 일제히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인상액을 논의했다. 충북도의원 한 명이 받는 의정비는 2023년 기준 월정수당 연 4193만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이다. 의정활동비를 최대 50만원 인상하면 연간 600만원을 더 받는다.

인상에 찬성한 위원은 20년 동안 동결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반대 측은 2022년 7월 의회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도의원들의 자료수집, 연구를 돕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는 점, 충북도의원 35명 중 절반가량이

겸직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달 23일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인상 찬성 측은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할 일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영리 행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에서선 방청객 의견 제시 시간이 있었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방청객 토론은 몇 분 만에 끝났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인

상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앞으로 도의원은 월정수당 317만4930원과 의정 활동비 200만원 등 517만4930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 인상에 동참한 건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대전 중구의회와 충남 보령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강원 춘천시의회 등이 의정활동비 상한선인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제 한파로 고통받는 서민 사정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올리는 모습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게다가 지방의회는 틈날 때마다 월정수당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최종권 박진호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2024년 02월 05일 (월)

원주 MBC

강원

강원도·시군의회 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

취재기자 황구선

광역의회는 50만원, 기초의회는 40만원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강원도는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한달 150만원에서 최대 인상폭인 50만원을 올린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도 각각 시·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한달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원은 5517만원, 원주시의원 4113만원, 횡성군의원은 3840만원의 연간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02월 05일 (월)

KBS 춘천

강원

“8,000원에 한 끼?”...“급식카드는 편의점에 서나”



[앵커]

방학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식 우려 아동인데요.

급식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이 카드로 한 끼 제대로 해결하기에도 힘든 실정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평균 음식 가격입니다.

갈비탕 한 그릇에 12,000원, 설렁탕도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돈가스 9,400원에 비빔밥이나 김치찌개도 평균 8,000원을 웃돕니다.

음식값이 불과 1년 사이에 많게는 1,000원씩 오른 걸겁니다.

반면, 강원도 내 결식 우려 어린이를 위한 밥값 단가는 8,000원.

2년째 제자립니다.

급식 가맹점이 있어도 먹고 싶은 걸 사먹긴 힘듭니다.

[박형복/음식점 사장 : "(돈가스를) 9,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동들이 와서 결식카드로 먹기에는 8,000원짜리가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급식카드는 일반 식당에선 쓰기 힘듭니다.

실제로, 편의점 사용이 급식카드 사용 실적의 38%를 차지합니다.

식당은 22%에 그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9,000원으로 올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인상이 안됐습니다.

[김영균/강원도 복지정책과장 : "1,000원 인상된 9,000원 안을 예산편성에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만, 올해 여러가지 재정 상황, 여건을 봤을 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직 급식단가를 안 올린 곳은 강원도 등 3곳 뿐입니다.

강원도 내 결식 우려 어린이는 7,800여 명.

급식 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웅/강원도의원 : "예산 절감 문제로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8,000원으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엄기숙 hotpencil@kbs.co.kr

철원인터넷뉴스

2024년 02월 05일 (월)

강원

강원철원-명절 대목장보기는 전통시장이 짱~!

郡·의회·봉사·사회단체 등 전통 5일장에 설 용품 구입

이현종 군수와 박기준 군의회 의장, 김정수 도의원 등을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회원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였다.



철원군청 공무원과 군의회 직원, 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진익태),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계숙) 등 단체 회원들이 5일(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송 전통 5일장을 찾았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펼친 이날 이현종 군수는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지역 상인들이 현장에 서 체감하고 있을 어려움은 더욱 크다"며 "설 명절 장보기는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 경기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활력도 불어 넣어 나눔의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철원군에서는 오는 6일(화) 와수전통시장, 8일(목) 신철원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13면

평창군 읍·면 순방 군정 청사진 공유

오늘 방림·대화·봉평면 방문

평창군의 올해 민선 8기 상반기 읍·면 순방간담회가 5일 오후 미탄면과 평창읍에서 심재국 군수와 군간부 공무원, 지광천 도의원, 김성기 부의장과 군의원, 각 읍·면의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순방간담회에서 군은 군민 중심 소통 행정을 최우선으로 민선 8기 올해 군정 비전과 주요 추진사업들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원봉사와 관중 자율 참여 등으로 강원 2024대회를 성공 개최하는데 헌신적인 지원에 동참한 군민들에게 감사사를 전할 예정이다. 순방간담회는 6일 방림·대화·봉평면, 7일 대관령·진부·용평면을 찾아가 계속된다.

심재국 군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3년차 군정의 비전과 청사진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인물동정 21면

◇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춘천)은 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주재.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11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횡성군의회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5일 횡성군청에서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의정 활동비 상한선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여론을 청취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종합 01면

채소 몇개 고르니 8만원 '공포의 명절 물가'

성수품 가격 급등 속 찾은 전통시장 상인도 소비자도 한숨
"비싸니 사는 사람도 없어 ... 물가 야속" 하소연만 쏟아져

명절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강원자치도 내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상인들에게선 '설 대목 같지 않다'는 반응이, 소비자들에게선 '물가가 야속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5일 오전 11시께 찾은 춘천 중앙시장. 진눈깨비가 날리는 날씨에도 상인들은 물건을 펼쳐두고 손님 끌기에 한창이었다.

설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며 선물과 성수품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인파는 많았지만 정작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과일 좀 보고 가시라'는 상인의 말에 관심을 갖고 다가간 사람들

도 가격표를 보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청과 상인 이모(71)씨는 "도매시장서 사과 18kg짜리 1상자를 8만원에 떴으면 게 요즘엔 10만원이 넘는다고"며 "그마저도 제수용으로 흠집이 없는 것만 골라내고 나면 반 상자 정도 팔게 되는데 가격이 비싸니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 상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어물·견과류를 전문으로 파는 박모(53)씨 역시 "설이라고 사람이 많지만 10명 중 10명이 가격만 묻고 지나간다. 이번처럼 최악인 명절은 처음"이라고 푸념했다.

시장에서 가장 손님이 몰리는 곳은 2,000~4,000원 단위로 저렴

하게 나물, 채소류를 소분해 판매하는 가게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산 직전 장바구니에 넣었던 물건을 빼서 다시 매대에 돌려놓는 소비자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주부 정모(72·춘천시 근화동)씨는 "고민하다 도라지를 뺐다"며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사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고 있다"고 했다.

장모(90·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씨는 검정 봉투 1개를 내밀며 "이만큼이 8만원어치"라고 했다. 봉투에는 부추 2단, 쪽파, 당근, 상추 등이 담겨있었다. 장씨는 "명절 전에 준비하면 저렴할까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는 미리 사뒀다"며 "자식들이 온다는데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명절이 야속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2024년 02월 06일 (화)

종합 01면

강원도민일보

강원 소기업 소상공인

빚 못 갚고 두손 들었다

강원신보 대위변제액 548억원

전년보다 370억원 이상 증가

대출상환 불가 사고금액도 급증

코로나 19를 버틴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지만 고금리, 경기불황 장기화 등의 허들은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대위변제액은 548억1800만원으로 전년(177억2500만원)대비 370억9300만원(209.3%) 늘어났다. 1년 동안 강원신보가 대신 갚아준 도내 소상공인들의 은행대출액이 370억원이나 불어난 상황이다.

대위변제건수도 폭증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변제건수는 3171건으로 전년(951건)대비 2220건(233.4%)이나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강원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또 지난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과 건수도 큰 폭의 증가치를 보였다. 도내 소

강원신용보증재단 2023년 사고 및 대위변제 수치, 증가 사유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사고	건수	2,152	6,507
	금액	38,237	108,435
	비율	1.35	4.16
대위변제	건수	951	3,171
	금액	17,725	54,818
	비율	0.67	2.72

기업·소상공인들의 사고금액은 1084억 3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년 만에 701억9800만원(183.6%)이나 증가한 것이다. 건수도 6507건으로 4355건(202.4%) 증가, 비율도 4.16%로 2.81%p나 상승했다.

이를 두고 도내 경제계에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여기에 영세한 자본력, 관광산업에 집중된 계절적 수요 등이 겹치면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에 이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특히 대대적으로 집행된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한계 상황에 있던 이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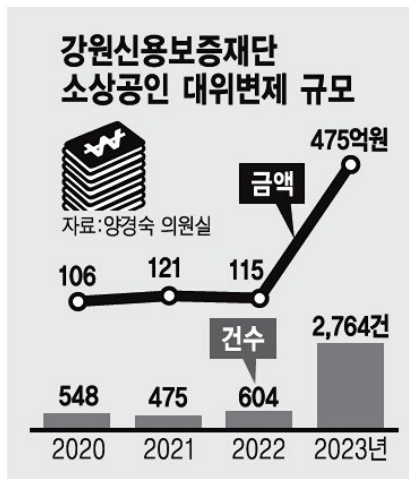
경제 07면

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 강원신보 대위변제 475억

1년새 313% 폭증 전국 최고
변제건수도 2,160건 증가
사고율 1.3%→4.1%로 확대
지원 대책 리스크 관리 시급

속보=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이 갚아준 대위변제액(본보 1월4일자 1면 보도)이 급증, 47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신보의 대위변제액은 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도내 대위변제액은 2020년 106억원, 2021년 121억원에 이어



2022년 115억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2,764건으로 2022년(604건)보다 무려 2,160건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강원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

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강원신보는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보증을 서고 있다.

앞서 강원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오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율도 급증했다. 2020년 1.1%를 보였던 사고율은 2021년 1.2%, 2022년 1.3%에서 지난해 4.1%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호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사회 04면

플라이강원 또 매각 불발 ... 상반기 재운항 불투명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하는 플라이강원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며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투자은행(IB)업체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2월 플라이강원 2차 공개매각에 입찰한 2개 업체 중 A건설사를 유력 인수 기업으로 보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A건설사가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앞서 법원은 A건설사에 플라이강원 인수·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플라이강원은 이에 따라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연기신청서를 제

출하는 한편 2차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원과 향후 매각 절차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이 두차례에 걸친 공개매각에도 계약이 불발되면서 올 상반기 재운항 목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며 지난해 5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명우기자 woolee@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14면

철원군 내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신청

군 유치추진위 오늘 결의대회

군부대 유희시설 활용 제안

관계부처 협력 모델 선례 강조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철원군입니다”

철원군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추진위원회는 6일 철원 오지리빙상장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신청

서 제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임대수 철원군체육회장, 빙상연맹 및 유소년클럽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이어 철원군은 7일 대한체육회 시설건립추진단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군(軍)부대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유희시설 활용과 수도권과의 1시간 내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 등 모

든 조건들이 철원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 유희시설 활용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를 지원하는 릴레이 응원도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철원 플라스마산업기술연구원과 철원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재경철원군민회 등이 동참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군부대가 떠난 연병장을 활용해 전국에서 유일한 실외 대형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철원에서 운영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원군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공한 관광지로 변모한 철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동계스포츠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한 유치의지를 밝혔다.

이재용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종합 04면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재임용 절차 중 사임...공백 장기화 우려

윤 감독, 서울시무용단장으로
"8년 근무 후배 앞길 막을까 걱정"
올해 공연 준비 차질 불가피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예술감독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2016년부터 8년간 도립무용단을 이
끌어 온 윤해정 예술감독 겸 선임안무자
가 5일 사임, 서울시무용단 단장으로 자
리를 옮긴다. 지난 해 7월 계성원 전 도
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 국립부산

국악원으로 자리로 옮긴 데 이어 도립예
술단체 2곳의 예술감독 자리가 모두 공
석이었다. 두 단체의 수장이 동시에 자
리를 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해정 감독은 이날 도에 사직서를 제
출했다. 도는 이르면 이달 중 두 단체의
신임 예술감독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
다. 도립국악관현악단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두 번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적격
자를 찾지 못해 감정환 부지휘자가 예술
감독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도립무용단은 윤 감독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올해 공연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

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예
견돼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
립예술단은 기획·홍보를 담당하는 자
체 사무국과 전용 공연장이 전무하고,
매 공연마다 대관 신청의 부담을 떠안아
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도는 윤 감독의 응모 사
실을 모른 채 도립무용단장 재임용 절차
에 착수, 지난 주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
이었다. 이에 무용계 일부에서는 "도립
무용단의 공백이 예상되는데도 사전교
감 없는 응모와 임용 계획 등으로 지역
단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관계자는 "재임용 절차를 밟
았지만 서울시무용단 응모 사실은 몰랐
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 감독은 "8년간 근무하면
서 후배들의 앞길을 막을까 걱정했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어려움도
크지만 채신하는 무용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립예술단 안팎에서는 이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채용 뿐 아니라 시스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립예술단 관계자는 "홍보와 사
무 업무를 예술단원들이 직접 행해야 하

는 부분이 많다. 다른 공립예술단에 비
해 인력이 부족해 예술감독 한 명이 끌
고 가기에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다.
단원 A씨도 "개인 기량에 기댄 예술적
발전에 앞서 시스템 개선이 없으면 공
립단체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술단의 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등 책
임지고 이끄는 근본적 환경변화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춘천에서 열리는 도립무용
단의 '무의 무아' 앙코르 공연은 준비를
완료,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진형 formati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10면

강릉원주대·강원대 공동 'K-LINC' 출범

강원형 지산학연 상생 플랫폼
1도1국립대 연계 양 대학 협력
인재양성·기업지원 중점 추진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강원형 지산
학연 상생협력 플랫폼 'K-LINC'를
출범해 주목된다.

강릉원주대(총장 반선섭)·강원대
(총장 김현영) LINC3.0사업단은 지
난 달 원주인터볼고 호텔에서 '지
산학연 상생·협력 플랫폼 'K-LINC'
출범식과 양 대학 통합 가족회사 교
류회를 공동 개최, 도내 전 지역을 아
우를 수 있는 통합형 산학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힘을
모았다.

이번 출범은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
하는 글로벌대학 30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각 대학의 강점
을 활용해 특성화된 산학연 협력을 추



강릉원주대(총장 반선섭)·강원대(총장 김현영) LINC3.0 사업단은 지난 달 원주인
터볼고 호텔에서 '지산학연 상생·협력 플랫폼 'K-LINC' 출범식과 양 대학 통합 가
족회사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진하고 있는 양 대학 LINC3.0사업단
은 1도 1국립대 체제 구축과 연계해
춘천·원주·강릉·삼척을 중심으로 한
강원 전체의 산학협력 거점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두 사업단의 통합 지산학연 협력 플
랫폼인 'K-LINC' 출범으로 LINC3.0
기술혁신 선도형과 수요맞춤형장형
의 양 대학이 유형적·지리적·산업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됐다. 향후 인재양
성 교육 협업, 통합적 지산학 공유·협

업 플랫폼 구축, 양 대학의 강점을 기
반으로 한 가족회사 Cross 지원체계
구축, 융합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
원 등 실질적인 협업 활동이 추진돼 대
학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LINC3.0사업단(단장
신일식)은 '수요맞춤형장형' 사업 수
행대학으로서 산업수요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과의 협력·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 중이다.

강원대 LINC3.0사업단(단장 이
광호)은 '기술혁신 선도형' 사업 수행
대학으로서 취업과 창업에 강한 다양
한 인재양성 교육과 ideaLab 프로그
램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
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일식 강릉원주대 LINC3.0사업
단장은 "K-LINC 출범을 계기로 양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강원권 통합
가족회사 지원체계 구축 등 강원형
산학연 협력 성장 모델 확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산학이 함께 성
장할 수 있는 공유·협업 생태계를 조
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강원대 LINC3.0사업단장
은 "강원대 Kangwon National
University의 'K'를 두 대학 사업단
의 공동 브랜드로 한 'K-LINC' 플랫
폼을 통해서 대학-기업-지역이 적극
적으로 협력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2024년 02월 06일 (화)

강원도민일보

종합 02면

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집중

수소 클러스터로 경제성 보완 구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춘천 연장·원주 신설 확정으로 '수도권 강원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집중한다. 수도권과 영서를 잇는 GTX와 함께 영동권의 주요 교통망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을 관철시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진태 지사는 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GTX강원도 연장 확정 이후 주목하는 SOC사업'에 대해 "첫번 째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

이라고 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갔는데 점수(경제성 편익·B/C)를 잘 받아야 한다"며 "강원도 SOC 사업은 늘 점수가 안 나오지만 벌써(예타과정에서)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지사는 "예타가 시작된 이후(강원도)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선정되지 않았나"며 "이런 변화 요인을 담아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속 점수가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도 "강릉 KTX나 춘천 GTX에서 봤듯, 미래 수요가 반영되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현재 예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같은 해 6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토부 조사에선 B/C가 0.17에 그쳐 경제성 보완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덕형

2024년 02월 06일 (화)

강원도민일보

지역 08면

춘천시 GTX-B 연장 국가철도망 반영 박차

시, 국토부 논의 필요성 강조

5월 수요조사 반영 건의 계획

2030년 개통 가평군 공동대응

속보=수도권 광역급행철차(GTX-B) 춘천 연장이 가시화(본지 1월 26일자 1면 등)된 가운데 해당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춘천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이날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GTX-B 춘

천 연장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GTX-B 춘천 연장을 공식 언급한 이후 춘천시와 국토부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춘천시는 GTX-B 춘천 연장이 가시화 된 점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고 춘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대통령이 GTX-B 춘천 연장을 언급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춘천시는 올 5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요조사 때 GTX-B 춘천 연장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GTX-B 춘천 연장에 대한 사업비는 4238억원으로 추산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여건상 이는 쉽지 않다"며 "2030년 개통을 위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평군과 공동 대응할 계획도 갖고 있다.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플랫폼 확장을 비롯한 역사 리모델링, 정차역도 협의를 해야 한다. 앞서 춘천시는

자체 사업성 검토 당시 춘천지역 정차 2곳, 가평지역 정차 2곳을 설정했다. 이같은 계획을 국토부가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현재 운행하는 경춘선과 ITX-청춘 열차보다 GTX 열차의 크기가 큰 점을 감안하면 역사 개선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제 GTX-B 춘천 연장의 첫발을 댄 셈"이라며 "다행히 춘천은 선로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협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지역 09면

옛 드림랜드 개발 능장 속타는 지역사회

도-공사, 2028년 추진 예고
시의회, 일정 조정 등 요구
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 전달

속보=장기방치중인 원주옛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본지 1월 17일자 10면 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능장 개발 일정에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초면옛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는

도유지로 지난 2015년 민간 무상임대만료 후 장기방치 중이다. 지난해도의 현물출자로 강원개발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곳에 원주시가 지방정원, 공사가 오토캠핑장을 각각 조성키로 했으나, 해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와 공사 측이 도의 우선 현안과 제 해결을 이유로 해당 부지 개발을 2028~2029년쯤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측

의 오토캠핑장은 물론 도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시의 지방정원 개발도 사실상 불투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는 5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용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능장 개발 일정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문을 넘겨 좌절감을 준다"며 "도의 일

정 조정을 통한 시와 공사의 사업 동시 추진, 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시의 부지 무상 사용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원용대 시의원은 "도유지이지만 원주 요충지에 있는 소중한 땅인 만큼 원주 발전과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활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는 협의된 개발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고 시의 부지 무상 사용 등 현실적 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혜민

2024년 02월 06일 (화)

종합 02면

江原日報

“화천 ‘교육 1등 지역’ 자리매김 적극 지원”

이상민 행안부장관
커뮤니티센터 방문
책임돌봄모델 호평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등과 함께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화천이 교육 1등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화천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화천군수의 탁월한 시각과 열정으로 전국 첫 지자체 책임돌봄 모델을 만든 교육시책에 큰 박수를 보내며 120%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센터를 함께 방문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화천의 지자체 책임돌봄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살맛나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등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화천=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이날 최문순 화천군수는 “커뮤니티센터는 공간통합+스마트 돌봄+온종일 돌봄+안전이 결합된 가장 진화된 형태의 돌봄모델”이라며 “아이들이 교육차별을 받지 않고 즐겁게 뛰놀고 배우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인 초등 저학년 보육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화천군이 건립, 오는 27일 개관된다.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8억원 등 총 216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135㎡ 규모로 건축됐다.

초등 1,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

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표현영어, 이동체육, 독서+스피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과 김 지사는 커뮤니티센터 방문에 앞서 중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육군 7사단을 위문했다. 이 장관과 김 지사는 전투복을 착용한 후 역사관을 관람하고 충혼당을 참배한 뒤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기영·신형철기자

2024년 02월 06일 (화)

사회 05면

江原日報

‘34cm 눈폭탄’ 도로·항공편 마비 교통사고 속출

미시령 옛길 등 고갯길 차량 통제
버스 노선 대거 결행·단축 운행
도 재난대책본부 1단계 가동

5일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지역에 최대 34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 3시15분께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5터널 내부에서 벤츠 승용차가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차량 내부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46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에서 코란도, 벤츠, 카니발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코란도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성군 간성을 신안리의 회전교차로에서도 오전 10시6분께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2대가 서로 충돌, 60대 여성 A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건의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설과 기상 악화로 인해 일부 도로와 항공편이 마비되기도 했다.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구간이 이

날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성 델피노 입구~미시령 정상 6.6km 구간 또한 통제되고 있으며, 거진해안도로 2km 전 구간부터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원주 군도 8호선 배재고개, 영월 군도 15호선 도로, 춘천 구 403호 새밀터널 등 구간도 통행이 상시 차단되고 있다.

이 밖에도 버스 노선 13개가 결행됐고, 36개의 버스 노선이 단축·우회 운행했다. 원주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4편(출발 2편, 도착 2편)이 모두 결행됐으며, 국립공원 66곳이 일시 폐쇄됐다.

강원자치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장비 1,246대와 인력 2,406명을 배치해 제설 작업과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적설량은 인제 조침령 34.6cm, 홍천 구룡령 34.2cm, 강릉 삼당령 33.8cm, 고성 진부령 32.6cm, 고성 미시령 32.3cm, 삼척 도계 31.2cm, 속초 설악동 30.7cm, 강릉 성산 29.4cm, 양양 오색 26.8cm, 평창 대관령 25.9cm, 강릉 왕산 25.2cm, 삼척 하장 22.5cm, 양양 영덕 20.2cm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6일까지 강원지역에 눈 소식이 이어지겠다”며 “시민들은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와 교통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겸·황민진·최영재·김천열·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종합 01면

강원 영동·산지 30cm 눈폭탄

인제 34.1·강릉 28.8cm 등 적설

오늘까지 눈 예보, 시설물 유의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3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졌다. 5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인제(조침령) 34.1cm·홍천(구룡령) 33.7cm·강릉(삼당령) 32.9cm·고성(진부령) 32.2cm·삼척(도계) 30.6cm·강릉 28.8cm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아침최저기온은 영서 -7~-3도, 산지 -11~-9도, 영동 -5~-1도로 예보됐으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4~6도, 산지 -2~0도, 영동 2~4도로 낮 동안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습하고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재훈 ▶관련기사 5면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종합 01면



설 연휴 코앞인데 ... 연일 폭설에 '雪雪'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대관령에 2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5일 강릉시 성산면 옛 영동고속도로에서 제설차량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사회 05면

폭설에 버스 결행·미끄럼 사고 속출...지자체 '제설 전쟁'

산지와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자 각 지자체들이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또 미끄러운 길에 각종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 눈폭탄에 지자체 대응 총력

강원도내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각 지자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장비 1246대와 인력 2406명, 제설제 1554t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다. 많은 눈이 내린 태백시는 공무원들과 군장병들이 함께 제설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면서 국립공원 66곳의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다. 이산호 태백시장은 SNS를 통해 "폭설로 30cm 이상의 눈이 쌓여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부활동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많은 눈에 시내버스 등 교통편도 우회노선이 지정되거나 단축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강릉왕산면 일대



고성 농민 트랙터 제설작전 도내 산지와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5일 고성군 간성읍 어천1리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마을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동환 객원기자

도내 산지·영동 중심 대설특보

안반데기·거진해안도 한때 통제

어선 2559척 침수대비 안전조치

는 최근 내린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많은 눈이 내려 80cm 이상 쌓였다. 이에 왕산면 일대는 버스 등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안전을 위해 회차했다.

안반데기 일대는 도로가 통제됐다.

눈이 내리자 강릉시는 가용 장비를 총 동원,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화갑울 등을 뿌리며 결빙에 대비하고 있다. 마을주민들도 개인 중장비를 이용, 마을안길 눈을 치우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산간지역에 습설이 내려 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고성지역의 경우 진부령 정상부의 간성읍 흘리와 미시령 일원에 3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풍랑주의보에 따른 월파 우려로 거진해안도로 전

구간이 6일 오후 4시까지 통제된다. 진부령 정상에서 흘러 마을까지 마을버스의 운행이 중지됐다.

이날 강원도내 13건의 (정선 1건·태백 4건·삼척 8건) 시내·마을버스 노선이 결행됐으며, 26건 (강릉 8건·정선 6건·태백 3건·삼척 3건·홍천 1건·고성 3건·양양 2건)의 노선은 단축됐다. 또 10건 (강릉 6건·정선 1건·삼척 1건·인제 2건)의 노선은 우회노선이 지정됐다. 눈의 무게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어선 2559척도 안전조치됐다.

■ 눈길 사고도 잇따라

많은 눈에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도 속출했다. 5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눈 관련 소방활동은 총 7건으로 4명이 구조됐다. 교통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눈으로 인한 낙상 1건이다.

5일 오후 3시 4분쯤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동해고속도로에서 차량 단독 사고와 3대·4대 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같은날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에서 승용차 두대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앞선 오전 11시 46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오전 8시 34분쯤 태백에서는 눈을 치우다 넘어진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배·신재훈·지산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경제 07면

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할증 20% 일괄 적용

정부 여객車 운임 개정안 행정예고
밤 10시~새벽 2시 할증률 인상

밤 10시 이후 적용되는 시외·고속
버스 심야요금이 일부 인상될 전망
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외·고속버스 심야할증률

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밤
10시~새벽 2시 10%, 새벽 2시~4시
20% 이내 수준에서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조정해 밤 10시~새벽
4시 사이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시
외·고속버스는 모두 20%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
스 요금은 지금보다 10%가량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동서울~춘
천 시외버스요금은 일반 시간대 8,
600원,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의
경우 9,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20%
이내로 할증 폭이 확대될 시 심야요
금은 최대 1만320원까지 오를 수 있
다.

국토부는 이번 운임 조정에 대해
감소추세인 심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
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사설/칼럼 19면

설 명절 체감물가 더 내려가야

-각종 식품류 인상에 보험료도가세,시민 고통 덜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류를 가리지 않고 다수 품목이 올라 식료품비 급등에 국민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류는 수확철이 아니어서 겨울이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되지만, 소금 설탕 당면 등과 같은 가공식품류 중에서도 일부는 최고 20% 이상 오르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수품과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어오르면서 설 명절 준비에 근심이 커졌습니다.

강원통계지청 2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바로 전달인 12월에 비해 6.3% 올랐고 1년 전인 2023년 1월에 비하면 무려 10.2% 인상됐습니다. 파와 같은 신선채소는 12월보다 무려 12.6% 올랐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명절 성수품이고 수확제철이 아닌 측면이 있어 인상을 각오하고 있긴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각종 가공식품류 가격입니다. 상시로 쓰는 소금과 설탕을 비롯해 아이스크림과 우유 등 물가관리 대상인 가공식품류의 절반 이상이 물가 평균 인상률을 뛰어넘었습니다.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항목은 식품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부문도 확인됩니다. 특히 보험 서비스료는

2023년 1월 대비 올 1월은 무려 18.2%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걸쳐 가파르게 올랐던 도시가스료와 전기료 역시 오름세가 여전해 4~5%대 인상률을 보여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고통은 2%대로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수치와는 판판입니다.

체감 물가로 고통받지 않도록 생계 및 생활과 밀접한 전반적인 가공식품요금 및 보험료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유통하는 가공식품 전반 및 보험료와 같은 서비스료, 공업제품 등 품목을 확대해 물가 관리에 실효를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 근로자 임금이 전국 하위권에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이면 단기 일자리마저 사라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하는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물가 관리에 품목에 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법적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상황을 살피고 대응하는 세심한 자치행정력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

사설/칼럼 19면

고향사랑기부제 올해가 중요하다

-상한액상향안등 국회의결... 선의 경쟁 필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모금 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제도가 안착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올해엔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는 수준까지 기부금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와 모금 독려 등 전 과정에서 더욱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시군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 기부제가 본래도에 진입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도 개선은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 상한액을 높이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금지했던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가 허용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연간 500만원인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적 근거도 명문화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즉시 시행돼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기부제를 통한 모금은 전국적으로 650억 2000만 원, 기부 건수는 52만 건에 달했습니다. 모금액이 많은 지역 1위는 전라남도와 전남의 시군이었습니다. 모두 14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상북도 약 89억원, 전라북도 84억원 순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52억 9403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시군의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강원지역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가 성패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제도를 더 개선할 여지가 없지만, 보완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출향민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고, 대상자가 원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도내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도 모색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사설/칼럼 19면

선거구 획정, 정치 신인 싹을 자르는 행위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강원지역 선거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른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유불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자는 정치 신인들이다. 현역 의원들은 신진 정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만 정치 신인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 획정, 정치 신인들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새겨 들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나랏일을 할 제대로 된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볼 시간이 줄어드는 폐단을 낳게 된다. 여야는 당장 당리당락을 접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마지막 판단과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정치 개혁은 성숙한 유권자 의식에 달렸다. 여야는 곧 공천을 통해 총선 주자를 내세울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총선 공천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그 자체였다. 문 제투성이 인사를 공천하고, 향후 의정활동 능력보다는 후보 이미지가 득표에 도움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유권자는 정당이 낸 후보를 무조건 찍는 쪽두각시가 아니다.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을 소중한 시간이 이제 유권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 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을 찾고, 차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고르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당의 이념과 정책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의 가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려워진다. 사회를 변화시킬 진보적 생각의 틀도 필요하고, 너무 급한 변혁이 가져올 부작용을 견제할 보수의

안정감도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대거 뽑아야 한다.

균형 감각이 있고 다름을 용인할 줄 아는 열

지역구 조정 놓고 유불리 싸움만 계속

현역 의원들, 의정보고회 통해 적극 홍보 나서

유권자들, 양극단 치달는 정치꾼들 숙아 내야

린 진보, 열린 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 반대로 상대를 배척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독한 말로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려는 후보들은 퇴장시켜야 한다. 진보나 보수의 가치를 실천할 콘텐츠는 없으면서 진영 간 싸움만 부추겨 존재감을 유지하는 가짜 진보·보수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양극단의 정치꾼들을 또다시 국회에 보낼 수 없다. 자질 없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저질 국회는 반복된다. 실행 가능성보다는 당장 인기에만 영합한 공약을 내놓는 포퓰리스트들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고, 국민이나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06일 (화)

사설/칼럼 19면

따뜻한 설 명절, 장바구니물가 안정에 달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름값이 4개월 만에 반등하고 과일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 때문에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갔지만 정작 서민들은 장바구니물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에 따르면 1월 다섯째주(1월28일~2월1일) 도내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0.64원 오른 1,593.5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1,505.8원으로 1주일 전보다 7.1원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과일은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월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0.2% 올랐다. 이 중 신선과실이 21.4%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작황 부진으로 대표적인 선물·제수용 상품인 사과가 43.7% 급등했다. 또 다른 성수품인 배와 귤도 각각 38.4%, 17.4% 상승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을수록 설 차례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소비자들이 물가 둔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안 그래도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 탓에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서민들은 더욱 힘겨운 명

절을 보내야 할 판이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응답자 98%가 장바구니물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가 사과 등 과일값 폭등이었다. 고공행진을 벌이는 설 물가에 서민들은 "차례상 차리기 겁난다"며 아우성이다. 정부가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함께 가격 안정 자금 840억원을 투입기로 했지만 아직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서민과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과 고통을 덜어 주기 힘들다. 물가가 하락하는 것과 단지 물가 상승률만 둔화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가 인상 부담은 쌓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바구니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채소물가 상승을 농산물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지자체는 주목해야 한다. 과일값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채소값은 1월 들어 폭등했다. 마침 설 명절까지 다가오고 있다. 생산비 증가와 작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가계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이제는 물가 안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